

광주 서구청장 재선 非민주野4당 단일화 추진

“단일후보로 ‘민주 아성’ 허물겠다”

“남구 보선 돌풍 잇겠다”...선거판도 양자구도될 듯

오는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가 지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처럼 민주당 대 비 민주당 양자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28 광주 남구 보궐선거에서 단일후보로 민주당에 맞서 40%대 지지율을 이끌어내는 돌풍을 일으킨 만큼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서도 단일후보 카드로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린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광주시당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비민주당 야 4당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 단일후보를 출마시키겠다”고 밝혔다.

야 4당 관계자들은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보여

줬듯이 광주는 민주당 독점 구조를 넘어설 새로운 정치 흐름이 형성됐다”며 “견제 없는 독점 권력은 부정 부패를 낳고 기득권 구조로 굳어져 광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식적인 단일화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연대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적 지방자치의 꿈을 광주 시민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야 4당은 각 정당별로 이달 말까지 후보를 확정된 뒤 단일화 일정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10·3 전당대회에 ‘울인’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단일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 민주당 성향이 비교적 강한 서구의 정치적 특성을 고려해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단

일후보를 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면 관세가 더욱 유리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지난 7·28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충분한 ‘학습효과’가 있다는 점도 야 4당을 고무시키고 있다.

현재 각 정당은 후보 확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서대석 후보가 유력하며, 진보신당은 윤난실 시장위원장 추대목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강기수 후보 외에 이삼갑 변호사 등의 부인물 영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당도 현재 후보 인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나 후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논의 중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일화 방식 등을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야 4당 단일후보를 성사시켜 광주에서 민주당 일방적 선거구도를 깨는 파괴력을 보여줬던 지난 7·28 광주 남구 보궐선거 이후 2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비민주당 단일후보를 만들 경우 충분한 승산이 있다”면서 “야 4당 모두 이러한 부분에 공감하고 있어 단일후보는 반드시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 4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비민주당 단일후보가 나올 경우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선거 판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차례상 차리기 어려워요” 14일 광주시 북구 오치2동 주민센터에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차례상 차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책임운영기관 실적 나쁘면 기관장 퇴출 설치·운영 법률 개정안의 열매

정부가 경영 실적이 좋지 않은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하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주거나 계약 해지 등 책임을 지게 하는 기관 운영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기관장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성과가 좋지 않으면 기관장의 책임이나 과실 등이 없더라도 계약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책임운영기관은 2000년 국립중앙극장과 국립중앙과학관 등 10개 기관에서 시작해 올해 38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연합뉴스

여수에 글로벌 석유회사 유치

정부 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
투자 촉진법 개정...전남 관광 인프라 확충 도움

정부가 제조업 중심이던 이렇듯 온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대,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남해안권에는 일본, EU, 중동자본을, 여수에 글로벌 석유회사를 유치하는 한편, 유망한 관광·레저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광레저펀드 조성방안도 마련하기로 해 전남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지식경제, 기획재정 등 13개 부처 장관과 16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차관 최경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부문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관광·레저 분야와 관련, 정부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을 고치고 ‘어촌어항법’으로 개발된 국·공유지에 대해 외투기업과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외국인투자촉진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마리나항 개발사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현재 마리나항으로 지정된 전남 7곳(목포·여수·함평·진도·해남·고흥·완도)의 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마리나항 개발시 숙박

인프라 확충 및 인근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서 마리나 항만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서해안과 제주도 복합관광단지에는 중국·중화권 자본을, 남해안은 일본·EU·중동권 자본을 주로 유치한다는 방침 아래 관광단지 안에 휴양형 주거, 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설치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을 고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류·SOC·유통 분야의 경우 여수를 비롯한 오일 허브 배후 단지에 아시아 지역 진출 거점으로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글로벌 석유회사 유치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등에서의 외국 의료기관 설립 절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식서비스 분야와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제주 실증단지 사업 및 후속 거점도시 사업 등에 기술력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유치와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이들 기업에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전문사업(ESCO)에 대

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설비투자 용자예산을 올해 135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늘리고 3000억원 규모의 ESCO 용자기금을 새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당 500억원, 사업당 1500억원으로 각각 설정된 용자지원 한도를 없애고,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GE, 지멘스 등 원천기술을 가진 글로벌 기업과 국내 ESCO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 및 합작 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IT·복합서비스 쪽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올해 2000억원 추가하고,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콘텐츠 펀드’를 2013년까지 새로 만들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업융합촉진법 제정과 원격 의료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u-헬스, 3D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핵심기술도 외국인투자 조세 감면 규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R&D센터도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점 유치하고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한도를 현행 투자대비 최대 30%에서 40%로 높이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10인 이상 고용시 월 5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국비 50% 지원에서 12개월 6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통일비용 최소 3500조원”

경제전문가 설문 “통일세 고민할 시기”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최소 3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 통일비용이 독일이 통일 후 20년간 지출한 3000조원을 넘어서 최소 350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통일과정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이 19.1%,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

비용이 34.4%,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 격차 해소 비용이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세 도입 같은 통일비용 마련방안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50.0%)라는 응답과 ‘당장 심도 있게 논의·추진해야 한다’(20.0%)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없었다.

통일비용 확보 방안으로는 통일세 징수를 꼽은 응답이 50.0%로 가장 많

았고,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를 직접하는 방안을 비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 재정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이 20.0%였다.

통일세의 과세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0%,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이 좋겠다는 응답이 30.0%를 차지해 경제전문가들은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 대상의 통일세 징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한 세대(30년)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본 사람이 95.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5~10년이 20.0%, 10~20년이 45.0%, 20~30년이 30.0%였다. 5년 이내에 통일될 것으로 본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연합뉴스